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40호

###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국가대표 졸남기선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

### 최의창 기고

**‘위드 코로나’는 ‘위드 스포츠’를 의미한다**

최의창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겸 서울대 스포츠진흥원장

### [스포츠 폭력]

**“판사님, 성폭력 증거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하나요”**

이소연 쿠키뉴스 기자

**‘女미성년자 폭행’ 하키 코치 재심...시험대 오른 스포츠공정위**

정형근 SPOTV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체육지도자 자격 회복 결정**

신성룡 뉴스핌 기자

### CIVID-19와 스포츠

**“20~30대 이용 많은데”...백신패스 도입에 실내체육시설 ‘한숨’ 기사 모아보기**

강영훈 연합뉴스 기자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http://www.sportscm.org)

## 보도자료



배 포 2021년 10월 27일(수)

보도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 성명서

### <국가대표 줄넘기선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

지난 9월 초 우리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다. 중학교 3학년생인 16세 국가대표 줄넘기선수가 26세의 코치에게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신고였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코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10월 23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다. 국가대표를 꿈꾸는 미성년 선수에게 성인인 코치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건 신고 후 진행된 일련의 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 유사한 체육계 성폭행 사건의 판박이라는 점이다.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동료 선수들은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신속히 제출했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 대한체육회, 의정부 체육회, 해당 운동부가 소속된 학교, 그리고 종목 협회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줄넘기 협회는 홈페이지에서 국가대표 선수의 사진을 내렸을 뿐이다.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단체들은 신속한 사건의 처리를 묻는 질문에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이 지났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고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라며 고립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과거 수많은 성폭력 피해선수들이 겪은 피눈물과 대통령까지 나서 근절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비극을 계속 마주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과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전담 기관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는 절망한다.

2020 도쿄올림픽과 도쿄패럴림픽에 환호하고 전국체전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한 어린 소녀의 절규는 무관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어쩌면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이들은 조용히 사건이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고 책임을 져야 할 당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로 상처받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종목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 없다. 관계 당국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가해 코치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하나. 가해 코치의 학교와 줄넘기 협회는 관리 책임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

하나. 문체부, 대한체육회는 줄넘기 협회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

2021년 10월 27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 [최의창 기고]

# ‘위드 코로나’는 ‘위드 스포츠’를 의미한다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걸 수 있게 될 듯하다. 작년 1월 코로나19로 일상 제한이 시작된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물론, 단계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다. 3단계로 진행하며 한 단계 당 4주간 시행 및 모니터링 기간을 적용한다고 한다. 어찌됐든, 국가적 정책기조의 변화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확정된 세부적 회복 조치는 운동에 목 타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여전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돼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가 48시간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틀마다 새로운 패스를 제출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보통 일주일에 2~3회, 매회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헬스장에 갈 때마다 2~3시간 걸리는 사전 검사완료 및 증명서 수료 후 운동하라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상황이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한 이상, 국민건강을 방역과 보건 차원에서만 제한하지 않도록 강권하고 싶다. 많은 이들이 지난 2년간 강력한 운동제한 조치로 몸무게는 ‘확찐자’로, 근육량은 ‘확쪼나’로 됐다. 일상회복에는 국민 생활 패턴만이 아니라 건강 회복도 포함된다.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 회복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심신건강은 단계적으로 회복돼야 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은 단번에 회복돼야만 한다.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로 옮겨간 백신 선진국들이 있다. 공통점은 스포츠 활동을 일상화시킨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방역상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은 있으나, 반면 국민 건강 증진이나 정서적 활력 진작 면에서 긍정적 결과도 함께 얻어진다. 무엇보다도 스포츠로 인한 경제와 산업 활성화 효과도 상당하다. 뉴스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스포츠관련 소상공인들은 거의 아사직전까지 내몰려져 있다.

‘위드 코로나’는 ‘위드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스포츠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 아니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선진국이다. 일상회복에 스포츠회복이 제1차적 고려대상이 돼야만 한다. 스포츠를 중시하지 않는 일상회복이란,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스포츠 활동이 회복되지 않는 일상이란 도대체가 일상(日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일상이거나 왜곡된 일상, 즉 ‘이상’(異常)일 뿐이다.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어 야외 스포츠 활동이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있다. 운동애호가 발걸음은 빠르게 체육관과 헬스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농번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이 코앞인 이때, 방역패스 같은 제한하기는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설상가상 악재로 작용할 뿐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결단한 위드 코로나로의 일상전환 노력을 빛바랜 것이 되게 만든다. ‘위드 스포츠’는 조금씩 풀어야 할 빚장이 아니다. 가뭄철 저수지 수문처럼 한 번에 활짝 열어야 한다. 운동 가뭄으로 건강 흉년이 된 한국인 일상에 스포츠 논물대기가 절실하다.

구제금융 외환위기 시절 박세리 US 여자오픈 우승과 한국팀 한일월드컵 4강 진출 등 스포츠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마다 한국인 일상을 지탱한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전환으로 지난 2년간 국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 한국으로 세워나가려 하고 있다. 대환영이다. 다만, 나같은 일반 국민이 ‘위드 코로나’로 기대하는 일상생활은 ‘위드 스포츠’, 즉 스포츠가 넘쳐나는 일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 “판사님, 성폭력 증거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하나요”

KUKI NEWS

성폭력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정보로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조재범이 재판에 계류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매체에 제공했다”며 “이는 불법이자 피해자 흠집 내기를 통한 의도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심 선수의 사적인 대화가 공개됐다. 경기 중 고의충돌 의혹과 국가대표 동료들에 대한 욕설 등이 담겼다. 공개 경위는 이렇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심 선수는 성폭력 입증을 위해 검찰에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제출했다. 이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조 전 코치 측에 전달됐다. 이후 포렌식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심 선수 사례뿐만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도 재판 과정에서 얻은 피해자 의료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해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검찰 진술조서, 일기·편지, 의료기록 등을 언론에 보냈다. 모두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피해자 정보를 보호할 법은 없을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가 아닌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벌이 애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난 1월 발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진척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재판자료가 유출됐다는 증거 등을 모두 피해자가 확보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피해를 처음부터 다시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판사모임 젠더법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은 지난해 9월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되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절차와 권리보장 규정이 재판실무와 동떨어져 있다. 또 법관이 그 취지를 제각각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며 “성범죄 재판에 대한 법원 밖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정보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피해자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례도 있다”며 “성폭력 2차 피해의 경우 현재로서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처벌 규정도 약하다”고 꼬집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판과정에서 획득한 피해자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공개·유포로 인한 2차 피해도 양형 기준에 포함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는 의료기록·탄원서·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가해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불안에 시달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단독] '女미성년자 폭행' 하키 코치 재심... 시험대 오른 스포츠공정위

중학생 하키 선수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르고도 '1년 자격정지' 징계에 그친 지도자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다.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논란이 지적된 스포츠공정위가 시험대에 오른다.

경기도체육회는 29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가해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여자 하키 선수들은 지도자의 폭행이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대학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지도자는 수원 소재의 한 중학교의 코치로, 해당 대학에서는 '재능 기부 감독'으로 활동하며 여자 선수들을 지도했다.

중학생 시절 A코치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피해 선수의 숫자는 상당했다. A코치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하키장) 지하 장비실에서 밟히고 맞고, '빠따' 맞고...운동도 못 그만두게 하고, 운동이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그것(폭행) 때문에 차에도 몇 번 뛰어 들었다. 욕은 기본적인 욕들 X발, X 같은 년아. 남자친구 사귀다 걸리면 애 쳐 배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권구멍이 막혔냐. 귀 드릴로 뚫어줄까. 이겨도 맞고 져도 맞았다." (피해자 A)

"중학교 2학년 때 볼 제대로 안 막는다고 스틱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히다가 어깨가 빠져서 병원에 가서 어깨를 꺾다. 그때 선생님이 어깨 빠진 걸 보고 X발 야 재 장비 벗겨서 위에 올려놔라고 말했다.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여러 이유로 어깨가 빠졌다." (피해자 B)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맞았다. 맞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할머니가 봐도 애 몸이 이렇게 멍이 많은데 이렇게 가만히 뒤도 되겠다. 선생님 눈치라는 눈치는 다 보이고, 중학교 때 이후로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본다. 그게 좀 심해졌다." (피해자 C)

"정강이나 멍치 까이는 건 대수였다. 어딜 가든 선생님 심기를 살피야 했다. (심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곧바로 분위기는 싸해졌고 뺨을 맞았다. (때리기 위해) 시계 풀고 반지 꺼내면서 천천히 다가올 땐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순간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기억이다." (피해자 D)

A코치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는 더 많다. '대학교 지하 창고'라는 폭행 장소, 때리기 전 반지와 손에 찬 시계를 푸는 특유의 행동, 폭행 방식 등이 일치를 보였다. 한 하키 관계자는 "A코치의 폭행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했다. (A코치의 폭행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도 중학생 선수들에게 거침없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A코치는 폭행과 폭언에 관한 내용 일체를 부인했다. A코치는 "손바닥 한 대라도 때렸다면 폭행이지만 선수들이 말한 잔인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스포티비뉴스의 보도로 A코치의 폭행·폭언·금품 수수 등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하키협회는 3월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변호사와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는 “하키 스틱으로 폭행해 골절 상해를 입히고,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몸을 짓밟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금품을 수수한 점도 인정이 된다”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 선수 측은 ‘숨방망이 징계’가 나왔으며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무효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6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징계절차 하자에 따라 재심의가 ‘각하’(대한하키협회 징계 무효) 됐다고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체육회는 학생 선수와 관련된 징계 건이라 심의 관할을 경기도하키협회 또는 수원시체육회(1차), 경기도체육회(2차)로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하키협회가 내린 ‘자격정지 3년’ 징계는 무효 처리가 됐고, 수원시체육회가 1차 징계 심의 관할 기관이 됐다. 그러자 수원시체육회는 대한하키협회보다 더 낮은 징계를 내렸다. 수원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9월 A코치에 대해 ‘1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1년 동안 조사한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8월 “A코치의 폭행과 폭언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다. A코치의 중징계 및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요청한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지만, 수원시체육회(1년 자격정지)는 대한하키협회(3년 자격정지)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심각한 문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징계 절차 하자’를 이유로 징계 관할을 재지정 했을 때 징계가 ‘감경’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0월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이 들어온 건 중 ‘징계절차 하자’로 파악된 것이 19건이다. 19건 중 7건의 재징계가 끝났는데, 놀랍게도 7건 모두 최초 회원종목단체에서 징계한 양형보다 감형됐다. 아이스하키의 경우는 최초 영구제명을 받았던 지도자가 자격정지 3년으로 징계가 줄었다. 시·도연맹 체육회에서 또 ‘제 식구 감싸기’식 씩어빠진 관행대로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실이 파악한 19건에는 하키 A코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1차 징계 기관인 수원시체육회가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한 상황에서 재심 기관인 경기도체육회마저 자격정지 3년 미만의 징계를 내린다면 또다시 ‘징계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감형 사례가 나오게 된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연고주의가 생긴 것 같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양형이나 관할권 문제를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장 계속

한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도체육회나 각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가 부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포츠공정위원을 구성할 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넣어두고 제 입맛에 맞게 징계를 내리는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들만 다시 2차 피해를 보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중징계를 요청해도 징계를 내리는 기관은 결국 스포츠공정위다. 심한 폭행이 있어도 스포츠공정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포츠 바닥은 좁다. 인맥이나 지연이 통하지 않는 상위 단체에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실제로 2019년 경남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선수를 폭행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른 B코치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또한 경남하키협회는 올해 3월 ‘계약금 갈취와 폭력’ 논란에 휩싸인 C감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가 C감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C감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티비뉴스는 지난 5월 경남하키협회 임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경남하키협회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상위 단체인 경남체육회 관계자는 “경남하키협회에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몇 차례나 말했지만 경남하키협회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 하키계 사정에 정통한 하키인은 “경남하키협회는 하키편에서 아주 유명하다. 어떤 죄를 지어도 무혐의를 낼 수 있는 곳이다. 징계를 내리기 전부터 하키편에서는 어떤 징계가 나올지 다 소문이 퍼져있다. 경남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들을 누가 선임하겠나. 임원진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징계를 논의하는데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회장과 전무이사 명단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A코치의 재심을 담당하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코치는 수원시체육회가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릴 당시 경기도하키협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코치의 폭행·폭언 사실을 최초로 알린 한 피해 학생은 “수원시체육회의 징계가 나오기 전 징계가 감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하키편에서 들렸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번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를 앞두고도 비슷한 소문이 들린다. 대한하키협회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수원시체육회에서 1년 자격정지에 그친 이유가 궁금하다. A코치를 신고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훈련도 못 하고 기숙사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신고를 취하지 않고 버틴 이유는 스포츠계에서 폭행과 폭언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다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권익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체육지도자 자격 회복 결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뤄진 행정 처분에 대해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28일 밝혔다.



체육지도자인 민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이후 문체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을 이유로 민원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체육지도자는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복권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앙행심위는 결격사유 발생 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20~30대 이용 많은데”... 백신패스 도입에 실내체육시설 ‘한숨’

“11월부터 일상 회복이 아니라 일상 스톱입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헬스와 골프, 수영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스포츠센터에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지난 25일부터 무상 휴회 및 환불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헬스와 골프, 수영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스포츠센터에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지난 25일부터 무상 휴회 및 환불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어제 뉴스가 나온 뒤부터 회원들이 '(백신 부족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백신 패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 한 헬스장 관계자도 "회원 중에는 1차 접종만 한 사람도, 미접종자도 있는데 갑자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입장 금지'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라며 "정부 지침대로 백신 패스를 시작한다고 해도 회원이 물리는 시간대에 일일이 접종 여부 및 음성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차치하더라도, 접종 순위에서 밀려 현재 1차 접종만 한 이들은 "일상이 멈추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내달 초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예정인 이모(30) 씨는 "젊은 여성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없어서 못 맞았는데, 하루아침에 미접종자에게 페널티를 주면 어찌라는 것이냐"며 "코로나19로 모임이 거의 없어 최근 등록한 실내 골프연습장 다니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다음달부터는 못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50~70대는 접종 완료 비율이 90%를 넘지만 20~30대는 70% 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젊은 층 회원이 대부분인 시설에서는 시행 초기만이라도 기존의 방역수칙을 병행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음 장 계속



수원시의 한 주짓수 도장 관계자는 "현재의 백신 패스는 혜택이 아니라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당분간만이라도 면적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기존의 방역조치를 함께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원의 크로스핏 체육관 관계자도 "정부 발표가 났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아직 어떤 안내도 없다"며 "1~4차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회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면서 버텨온 점을 고려해 우리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통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백신 패스 관련 기사에 "미접종자는 아예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지금은 마스크 쓰고 헬스 해도 되는데 워드 코로나에는 미접종자 이용 불가라는 게 무슨 논리냐"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불법 스포츠포토 도박' 전 두산베어스 정현욱 벌금형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0249\\_34873.html](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0249_34873.html)

대한체육회,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11026/109925813/3>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어촌 유망 학생선수 23명에 장학금 지원

<https://www.news1.kr/articles/?4475407>

과학으로 운동능력 향상시킨다...스포츠뇌과학단 출범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10301551003&sec\\_id=530101&pt=nv](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10301551003&sec_id=530101&pt=nv)

대한체육회, '탁구 유망주' 신유빈에 후원 협약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8\\_0001631143&cID=10502&pID=105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8_0001631143&cID=10502&pID=10500)

[속보]김총리 "유형·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1~2주 계도기간"

<https://www.news1.kr/articles/?4476317>

체육회, 읍저버프프로그램 개최...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과 연계

<https://www.inews24.com/view/1416823>

이재명 "체육 지원 늘리는 게 의료비 지출 줄이고 행복지수 높여"

<https://www.news1.kr/articles/?4477999>

경기도, 25일까지 스포츠 인권교육 등 수행 위탁사업자 공모

<https://www.news1.kr/articles/?4465109>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